

2016 노무관리 Monthly Review

September
9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차액정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인사노무 준비사항

○ 청탁금지법 시행 : 2016. 9. 28

- ▶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제공 금지됨
- ▶ 청탁금지법은 양벌규정으로, 법 위반 시 행위자 외 법인도 처벌 가능함에 유의

○ 주요내용

적용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장과 임직원, 학교 및 언론사종사자 등 ② 공직자등의 배우자 ③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등 ④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부정청탁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대상직무 : 인·허가, 처벌 감경·면제, 인사, 위원 선정, 수상·포상, 비밀 누설, 계약, 보조금·기금,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거래, 학교 성적, 병무, 평가·판정, 행정지도·단속·감사, 수사·재판, 중재
금품등의 수수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등'이란? 금전, 물품, 접대·향응,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시 형사처벌 * 수수 및 제공에 대한 약속, 요구, 의사표시 포함 -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시 과태료 부과 -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 관련 핵심 Q&A

Q1. 회사 직원이 업무관련 공직자나 언론인과 개인적 친분이 있어 금품등을 지급하더라도 회사가 양벌규정으로 책임을 져야하는지?

법인의 임직원이 업무관련 공직자나 언론인과 개인적 친분이 있어 금품등을 지급하였다더라도, 해당 법인의 업무범위·해당 임직원의 직위·금품을 주게 된 동기나 배경·법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해당 자금 출처가 법인인지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직원이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며, 법인이 양벌규정으로 책임 질 수 있습니다.

Q2. 양벌규정상 '사용자' 내지 '종업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법상 양벌규정의 '사용자 및 종업원'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따지며,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 외에도 법인 업무를 직·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외에도 회사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파견근로자나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양벌규정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하여 준법교육 및 관리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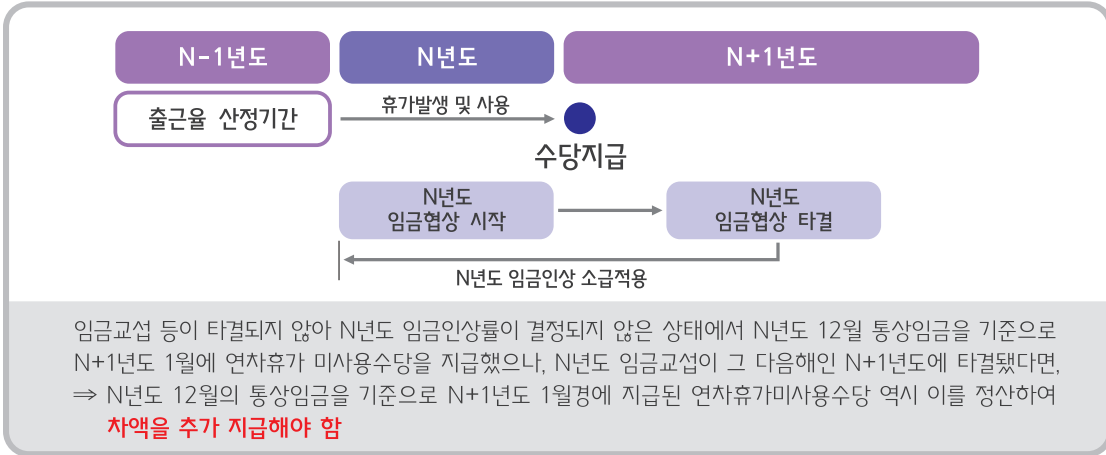
Q3. 양벌규정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회사가 해야 하는 주의감독 의무는 어느 정도인지?

임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법규에 대하여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청렴서약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업·언론·대관 담당부서의 대외접촉활동이나 접대비 사용에 대하여 법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전·사후적으로 내부결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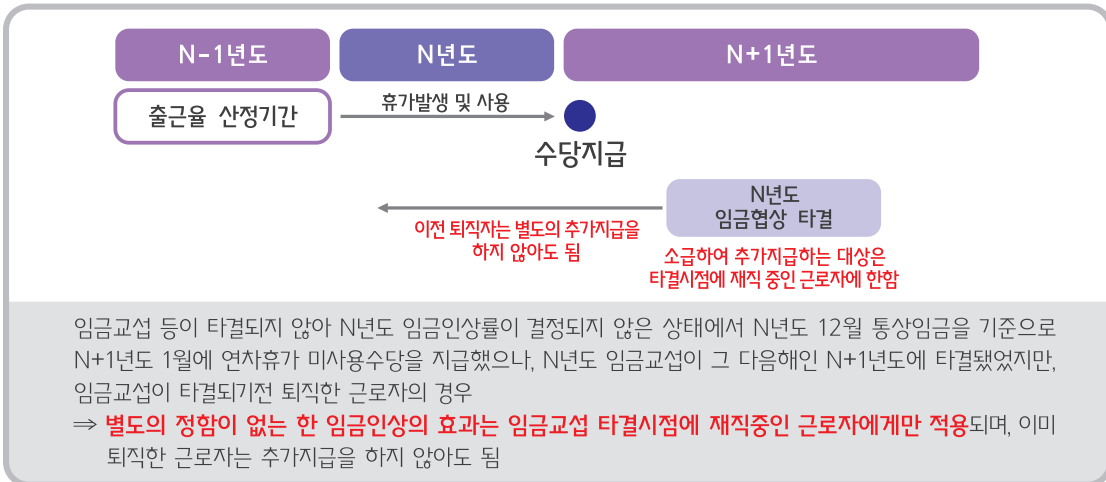
만약 청탁금지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범위만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방침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유지한다면, 양벌규정의 면책을 받기 위한 주의감독의무를 이행했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에서 실수하기 쉬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차액 지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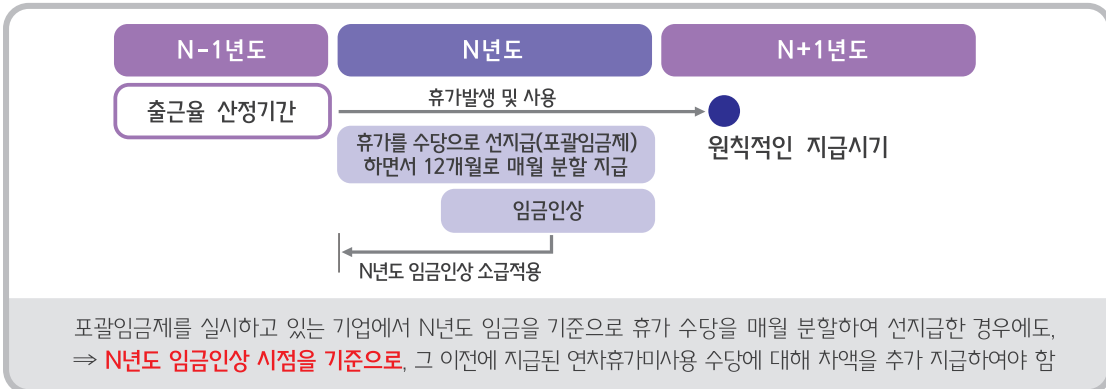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후 임금이 인상된 경우 : **차액 지급 필요**



○ 임금협상 타결시점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 **차액지급 불필요**



○ 포괄임금제 등으로 미사용수당이 선지급된 경우 : **차액 지급 필요**



서체 파일 저작권으로 머리 아픈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위하여, '중소기업 전용서체' 탄생!

중소기업중앙회는 더 가까운 곳에서 중소기업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KBIZ 한마음체 (고딕·명조)를 배포합니다. 저작권 고민 없이! 광고, 상표, 인쇄물, 현수막, 홈페이지 등에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및 라이선스 확인 www.kbiz.or.kr 문의 02)2124-3093

KBIZ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매월 중소기업 인사·노무 담당자가 쉽게 이해·숙지하여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실무를 내용으로 하는 「노무관리 Monthly Review」를 발간합니다. 현장에서 노무관리에 대한 질의·건의 사항이 있으면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 2124-32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하며, 무단 복사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